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구제금융기금을 둘러싼 불협화음

□ 독일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EU 및 주변부국가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의 안정화 공조체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함.

- 주변부국가들의 국채경매 성공으로 유럽금융시장의 급박한 상황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독일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차제에 그리스·아일랜드와 다른 방법의 구제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이는 과거와 같은 구제금융 지원으로는 과다재정적국의 문제 해결, 유럽 금융시장 안정화 달성, 유로화가치 유지를 성취하지 못한다는 시각에 근거
 - 또한 북부 유럽 국가들의 구제기금 과부하에 대한 대가에 비해 과다재정적 자국의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독일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구제금융기금 주장은 유럽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비해 유로집행위원회는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결국 포르투갈이 구제금융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구제금융기금의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구제기금 운용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며 구제금융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정긴축 조건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즉각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구제금융기금의 사용을 주장함.

- 구제기금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EU는 다음 정상회담인 2월4일까지는 사용되어야 하고 규모도 즉각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구제기금확충, 2013년 이후의 구제기금 상설화, EU전체의 재정긴축 법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금융위기방지 종합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 이후 사용하자고 주장함.
- 구제기금 사용 방법과 관련하여 EU 및 유럽중앙은행(ECB)은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현재의 4,400억유로 기금 모두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자국의 국채발행매각시 이용함으로써 ECB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직접적인 국채매입보다는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함.

* AAA 등급 유지를 위한 자본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4400억유로 중 2500억 유로만 실질적으로 활용가능

(Financial Times 1/19, Bloomberg 1/17)